



[대학 총장 인터뷰] 조동성 인천대 총장 “新대학평가시대 선도” 04



Life

[산업] 최태원의 인적 투자 SK유니버시티 신설 06



# 서울 광화문광장 리모델링, 정부청사 인근 손 안대기로

## 정부청사 기능 훼손 우려 우회도로 건설 방안 검토 市-행안부 온도차는 여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서 행정안전부의 반대에 부딪친 서울시가 행안부의 개입 여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박원순 시장 주재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등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 라인은 물론 김원이 정무부시장 등 정부 라인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회의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시의 재구조화 사업에 제동을 거는 공문을 보낸 행안부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시는 행안부가 관리하는 정부서울청사 영역을 배제하고 우회도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와 시는 재구조화 사업에서 경복궁 광화문 앞(T)자 도로 상단의 일



자 부분인 사직로-울곡로 구간을 폐쇄하고, 울곡로에서 종로1길로 꺾어 사직로8길과 새문안로5길로 이어지는 유(U)자 우회도로를 만드는 방안에서 충돌한다.

우회도로가 완성되면 세종대로를 포함한 기존의 광화문 앞 일대 도로는 티모양이 아닌 와이(W)자 형태로 바뀐다.

문제는 정부청사 후문 민원실 앞길인 새문안로5길이다. 서울시 계획은 청사 민원실과 경비대 건물 부지를 수용해 우회도로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

기존 사직로와 울곡로를 지나던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면 2개 차로에 불과한 지금의 새문안로5길은 턱없이 좁아 도로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행안부는 우회도로를 조성하는 목적인 광화문 앞 월대 발굴과 복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행안부가 관리하는 건물인 정부청사의 기능이 훼손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시는 “행안부와 협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는 한편 협의가 완전히 틀어지는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사 부지는 시가 강제수용할 수 없는 땅인 만큼 행안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회도로 폭을 줄여 정부청사 부지를 침범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행안부가 재구조화 사업 추진에 직접 난색을 보일 여지는 없어진다.

행안부의 반대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등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행안부가 정말 ‘실무적’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한 설득과

협이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안부와 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시는 올해 말에서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하는 착공 시기를 포함해 사업의 전반적 일정에 융통성을 두면서 행안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태도지만, 시와 행안부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힌다.

시는 행안부가 2차 ‘경고성’ 공문을 보낸 지난 9일 이후 실무진 대면 협의 자리를 만들려고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지난달 31일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현장을 찾아 진영 행안부 장관과 만났을 때 따로 자리를 마련해 광화문광장 사안을 논의하자고 직접 제안했으나 행안부 측이 거부조차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대시민 소통 부족과 여러 실무적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실무자 간 만남으로 상세한 내용 파악이 이뤄져야 해법이 나올 것”이라며 “지난주에는 행안부측 일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주에 만나 실무협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발표된 지난 1월부터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를 발표하자, 행안부는 ‘설계안에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과 부지가 포함된 것은 합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고 당시 행안부 장관이던 김부겸 의원과 박 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두 기관은 지난 5월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진 장관이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논의는 많이 했는데 합의된 것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행안부는 이어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은 뒤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전반적 사업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충분히 협의했는데 공문까지 보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안부는 이튿날 2차 공문을 보내 “선행조치 없이 추가 절차를 진행하면 추가 논의가 어렵다”고 압박을 계속했다.

이때 서울시는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충분히 협의했는데 공문까지 보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안부는 이튿날 2차 공문을 보내 “선행조치 없이 추가 절차를 진행하면 추가 논의가 어렵다”고 압박을 계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박원순 “삼양동 한달이 강북우선투자로 이어져”

## 삼양동 37개, 강북구 30개 ‘지역균형발전정책구상’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다양한 형태의 관심 속에 지난해 여름 전격적으로 시행했던 ‘삼양동 한 달살이’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다.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19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삼양동 37개, 강북구 30개 등 67개 사업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18일 한 해를 돌아보며 “삼양동 한 달의 경험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강북 우선투자’라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그 이후 시정 전 분야에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년 전 박 시장이 약

양지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현숲마을 커뮤니티 시설, 인수봉숲길마을 커뮤니티 시설 등이 대표적인 생활SOC다.

소나무협동마을 공영주차장, 미아역 리모델링, 나눔카 주차장 확대 등은 주차·교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아울러 마실길 전망마루, 강북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북서울 꿈의숲 전망대 도서 휴게공간, 삼양체육과학공원 게이트볼장으로 문화·여가 인프라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오랫동안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책 설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몇십년간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약속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관람객으로 붐비는 레고 전시회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레고 창작전시회 ‘코리아브릭파티 2019’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레고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530여개 일자리 창출목표

9월 말까지 21차례... 432개 기업 참여

9월 말까지 서울에서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21차례 열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첫 박람회는 오는 23일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다. 창업을 주 소재로 하는 권역 특성을 살려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제도 알아보기’ 등 특강이 준비됐다.

시는 내달 26일까지 이어지는 21회의 박람회에 총 432개 기업이 참여하며 일자리 535개 창출이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조영미 원장은 “실질적인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구성했다”며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10면 이상 공공시설 주차장 ‘나눔카 구역’

서울시, 나눔카주차구역 확대 지정

서울시가 10면 이상 시내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 최소 1면 이상 의무설치를 추진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나눔카는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다. 시는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은 나눔카 이용 시민들이 해당 주차장으로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이다.

기존에는 나눔카사업자가 각 공공·공공기관 주차장별로 협약을 체결해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공공부처 정책적으로 주차장에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설치를 본격화해 시 전체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 총 353면까지 나눔카주차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김현정 기자